

光州日邦





"기초의원이라도 우리 손으로 뽑자"

광주 남구 마을주민단체, 후보들 초청 토론회 개최

시의원 3명 무투표 당선 투표권 박탈에 풀뿌리 자치 위기 민주당 소속 후보 3명은 불참 주민자치의 희망을 봤다

"광역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민주당에 뺏겼으니, 동네 기초의원들이라도 우리가 직접 검증해서 뽑아 봅시다"

광주 남구의 한 마을주민단체가 26일 기초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남구의원 후보자 토론회'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선거에서 동네 주민들이 직접 기초의원 후보들을 초청해 지역 발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남구주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남구의 카페 남동풍에서 광주 남구의회 나 선거구(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동)후보자들을 초청해 좌담회형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단체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역·기초의회 후보들이 민주 당 공천을 받은 뒤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 면서,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자치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 남구를 대표하는 광역의원 3석은 모두 민주당 경선을 통해 공천된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남구의 광주시의원 3명 모두 민주당 공천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남구 유권자들은 광주시의원을 뽑을 수 있는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선거구에 다른 정당들의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은 탓도 크지 만,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라는 지역 정치구도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 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폐해로 인해 갈수록 지방선거의 취지인 주민자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구주민회의 측은 "지방자치의 싹이 말라가고 있는 척박한 광주 남구의 현실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의원만큼은 주민의 손으 로 뽑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주민 토론 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들과 패널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남구의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왔고, 의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좌담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정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됐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행사 취지가 퇴색됐고, '민주당 횡포' '민주당을 위한 지방선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은 "이것이 광주의 현실이고,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주민 민판기 (69·대촌동)씨는 "후보로서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의무인데, 광주에서 여당이라 불리는 민주당이 주민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지정했다

이 자리에 불참한 민주당 후보들은 "주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면 서 "하지만, 선거 막바지여서 유세 등 정당의 다 른 일정이 많아 불참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현로·진보당 김경희·무소속 주경철 후보 3명만이 참석해 예상 질문 5개와 주민들의 즉석 질문으로 진행됐다. 가 벼운 분위기였지만,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는 후보 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이날 토론 회가 주민 중심, 정책 중심의 건강한 주민자치 회 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 나주시·고흥군 ▶4면

키오스크 주문에 스트레스 받는 노인들 ▶6면

KIA 창이냐 SSG 방패냐 뜨거운 챔스필드 ▶18면



26일 오후 광주시 남구의 한 카페에서 '남구주민회의'가 기초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 판결 일선 사업장 재논의 불가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 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 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장관 박순애·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식약처장에 오유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김 후보자 사퇴 23일 만에, 정 후보자 사퇴 로는 불과 3일 만에 후속 인선을 단행한 셈이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다. 3명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 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이어 5개 부처(18개부처 중 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와 비슷한 비율이다.

오직 능력만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젠

더'등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박순애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 행정 전문가다. 2004년 이후 10차례 이상 기재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다. 교육 정책 수장에 공공 행정 전문가를 발탁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의약품 관리 당국에서 29년 간 일한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오유경 신임처장은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